



보도 일시	2023. 2. 17.(금) 15:30(회의 종료시)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3. 2. 16.(목) 16:00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 정시영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사무관 최현조 (02-2100-2034)

한덕수 국무총리,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
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안대책 논의

- ◆ '23년 대테러활동 계획: 위해요소 차단, 대비태세 유지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
- ◆ 울산·강원·충북 경찰특공대 창설 통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특공대 완편
- ◆ 국내 드론위협 현실화 계기, 전국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강화

□ 정부는 2월 17일(금)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다.

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
- 오늘 회의에서는 「2023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」을 반영한 「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과 「울산·강원·충북 시·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」 「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안대책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“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여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”고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.

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2022년 추진실적 >

- 정부는 국내·외 주요행사 시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, 위험인물·자금 적발을 강화하는 등 국내·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
 - 테러대상시설·수단에 대한 관계부처 대테러 합동 현장 컨설팅, 온라인 상 송포·화약류 제조법 및 거래정보 게시물 삭제·차단 등 테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.
- 또한, 「해적피해예방법», 「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 등 법령·매뉴얼 정비를 통해 대테러 활동의 근거를 보완하였고,
 -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('22.6월)과 국가대테러종합훈련('22.10월) 등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.
- 아울러, UN 대테러실이 우리나라를 국경보안 우수국가로 선정한 사례집을 회원국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,
 - ‘한미 핵·방사능테러 공동대응훈련('22.12월)’, ‘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’(10월, 경찰청) 등 국제 전술교류 및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였다.
- 입출항 신고·출입국심사 체계 개선, 계류시설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·발표('22.2월)한데 이어,
 - 거점 마리나항 관리실태 합동점검('22.5월), 출입국 절차 매뉴얼 제작·배포('22.9월)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였다.

< 2023년 정세전망 >

-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, 중동·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,
 - 북한에 의한 도발 위협 가중과 사회 부적응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반사회적 과격행동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.

< 2023년 중점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- ① 테러대상시설·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,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②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을 차단하고, 온·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·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.
- ③ 드론과 같은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을 확충하고,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- ④ 테러위협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테러위기 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,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.
- ⑤ 화생방·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, 국내·외 국가중요행사 안전 개최를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.
- ⑥ UN·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- ⑦ 대테러활동 근거 보강을 위해 관련 법령·지침을 보완하고,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테러예방·대응요령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.
- ⑧ 경찰특공대 추가창설(울산·강원·충북) 등 대테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, 최신 대테러시설·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.
- ⑨ 대테러 합동훈련, 통합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·훈련을 강화하고, 대테러활동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 학계와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② 울산·강원·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(심의·의결)

- 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울산·강원·충북 시·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한다.
- 해당 지역들은 △ 전력·정유시설 밀집(울산) △ 대북 접경(강원) △ 의료행정 타운 소재(충북) 등 테러 위협요소가 산재하나, 현 실정으로는 테러 발생 시 즉각대응이 어려워 지역별 특공대 창설이 필요하다.
 - 해당 특공대 창설로 18개 시·도 경찰청에 특공대를 완편하게 되었다.

③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(심의·의결)

- 최근 국내 드론테러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, 현재 드론 위협수준 및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실태를 분석·평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, 관계기관 합동 ‘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’을 마련하였다.
 -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, 단계별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 - 안티드론 핵심전략 자산이 될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,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미래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